

박병석 의장 “15일 원구성 처리”

여야 협상 결렬 후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 않고 여야 합의 주문

민주 “통합당의 국회
발목잡기에 대단히 실망”
단독 선출 재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에 나서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15일에 다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 결렬로 파국으로 치닫던 국회 원구성이 사흘의 시간을 벌었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오는 15일까지 여야간 마지막 합의를 주문해, 국회는 일단 비장 끝에서 선회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는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 7곳을 야당에 양보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거부하면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 소속 의원들도 속속 자리했다. 통합당은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만이 입장했다.

김성원 통합당 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일 여야 협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야당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성토했다.

김성원 수석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응수했고, 시간 경과로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김 수석이 발언을 이어가자 “큰소리로 얘기하라. 안 들린다”고 야유를 보였다.

여당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박 의장이 나서 “경청해 주기 바란다. (김성원 수석은) 더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대에 올라 자당 양보안을 거부한 것을 거론하며 “합의와 번복을 반복했던 20대 국회와 달리 게 하나도 없다”며 “또다시 재현된 통합당의 국회 발목잡기 행태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김영진 수석은 “통합당은 합의한 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은 야당과의 지지 부진한 협상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통합당은 오늘의 결정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뒤 박 의장은 “의사일정을 상정할 순서이나 의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다. 국가적 위기가 심각하고 민생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운을 폈다.

박 의장은 이어 “여야 합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 하겠다. 교섭단체대표들께서는 이제 결단과 리더십을 보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박 의장의 결정은 21대 국회 초부터

야당을 따돌린 채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기보다는 여야 합의를 통한 정상적인 선출을 위해 마지막 협상 말미를 주겠다는 의도로 풀린다.

관계상 자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당내 경선을 치러온 통합당도 양보안을 받아들여 상임위 배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배경도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에 상임위 배정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 명분도 있어서 이후 절차적 과정을 밟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의장과 여당간 사전교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한 팀포를 늦추며 통합당

의 양보안 수용을 기다린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노론자위’ 격인 상임위를 내주고도 원구성을 늦춘 데 대해 불만이 제기되는 양상이다.

김영진 수석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오늘 하지고 했다. (연기는) 의장 결정”이라며 “우리가 이렇게 미뤄진 것이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위기와 일하는 국회를 열자는 큰 대의 앞에 지금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라면서 단독 선출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 예상을 뛰어넘게 많이 양보해 당내에도 불만이 있다”며 “그것을 (야당이) 안 받은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뉴시스

박 의장 “합의 3일 주겠다”에 주호영 “더 이상 협상 없다”

“법사위 뺏기고는 야당으로서의 존재 의의도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여야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의 시간을 드린다”고 한 것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하려니 부담해서 미룬 것”이라며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렬을 선언해서 그 사이 접촉하거나 만날 일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뺏기고는

도저히 야당으로서의 존재 의의도 없고 국회 자체도 국회라고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며 “심지어 민주당이 그렇게 의석수를 자랑할 거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서 해보라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구성원리이자 민주주의의 구성원리는 3권분립 아니겠나”라며 “국회는 행정부와 대통령 권력 견제가 기본인데 언제부터인가 여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옹호하는 것

을 주업으로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6석이라고 (일방적으로) 표결하고 가자고 하면 국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중요한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져가면 야당은 들러리로서 의견만 내고 자기들 주장만 하면 모양새를 갖춰주는 거라 저희는 할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강제 배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질문에는 “강제 배분하면 배분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내년 예산 요구액 550조

기재부, 정부 각 부처별 예산 요구현황 집계
코로나19 극복·한국판 뉴딜 추진서 크게 반영

각 부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560조원에 육박하는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연속 6%대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예산이 크게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542조 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12조3000억원 대비 6.0% 증가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0%, 2019년 6.8%, 올해 6.2%, 내년 6.0% 등 출범 이후 매년 6.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은 364조8000억원으로 올해(351조1000억원)보다 3.9% 증가했다. 기금은 178조1000억원으로 올해(161조1000억원)보다 10.5% 늘었다.

12개 분야별로 구분하면 교육예산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분야에 대한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었다. 교육도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지 이를 제외하면 0.8% 가량

늘어난 규모다.

주요 분야별로는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12.2% 늘어난 26억6000억원을 요구했다.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D.N.A(데이터, 네트워크, AI)+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9.4% 증액된 26억5000억원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9.7% 늘어난 198조원을 요구하며 전체 요구안의 37% 가량을 차지했다.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사회간접자본(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등 SOC 분야에도 4.9% 증액 요구가 따랐다. 24조4000억원이다.

국방 분야는 핵·대량살상무기 대응과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비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장을 위해 6.0% 증액된 53조2000억원이었다. /뉴시스

전북선관위, 선거비용 보전액 32억1127여만원 지급

21대 총선·재보궐 등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총 32억1127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표총수의 15% 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게 된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억1364여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총선 후보자별로는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무소속 이영호 후보자가 2억4497만5980원

(97.5%)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보전받았으며, 이상직 전주를 후보자가 1억2649만16387원을 신청했지만 49.5%인 6273만1220원을 지급 받아 가장 적은 보전을 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19명) 28억9303여만 원 ▲진안군 수재선거(2명) 1억6189여만 원 ▲지역구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5명) 1억5634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선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운반비용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3725여만 원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